

2021년 프랑스 노동분야 주요 이슈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③ - 프랑스

이두형 (프랑스 루미에르 리옹2대학교 사회학 박사과정)

■ 머리말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2020년 3월 16일 대국민 담화에서 전쟁을 선언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위기에 맞서 전시와 같은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차례의 전쟁,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의 트라우마가 뿌리 깊이 남아 있는 사회에서 국가 수장이 직접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 프랑스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하며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치렀다. 두 차례의 국가 봉쇄를 시행하며 이동 자체를 엄격히 통제하기까지 했다. 또 긴 싸움에 맞서 프랑스 정부는 활용 가능한 모든 화력을 쏟아 부었다. 사실상 모든 활동이 통제된 상황에서 사회·경제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막대한 자본을 투입했다. 그런 점에서 2021년은 중요한 기점이다. 전년도부터 프랑스가 치렀던 코로나19와의 전쟁의 성과와 한계가 조금씩 나타난 시기이기 때문이다.

■ 연금 개혁 추진 2022년으로 연기

연금 개혁은 마크롱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는 2021년 11월 9일 대

국민 연설을 통해 연금 개혁 추진을 2022년 4월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개혁을 다시 추진할)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마크롱 정부가 마련한 연금 개혁은 현재 직종 또는 조합별로 상이한 42개의 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리고 포인트제에 기반을 둔 단일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오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외에 은퇴연령을 기존 62세에 64세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개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마크롱 정부의 입장이다.¹⁾

마크롱 정부는 2019년 말 이 같은 내용의 연금 개혁안을 추진했으나 노동조합 등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프랑스 철도(SNCF)노조 경우 5주 이상 파업에 나서며 노조 역사상 가장 긴 기간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²⁾ 과거 프랑스 철도노조의 가장 길었던 파업 기간은 1986~1987년 전개됐던 28일이었다. 이처럼 강한 사회적 반발과 더불어 코로나19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연금 개혁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프랑스 정치권은 은퇴연금 개혁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마크롱 대통령이 새로운 은퇴연금 시스템 도입을 위한 사회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언급하자마자 상원에서 연금 개혁의 핵심 축인 은퇴연령을 상향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프랑스 상원은 2021년 11월 12일 현재 만 62세인 은퇴연령을 만 64세로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통과시켰다.³⁾ 오늘날 프랑스의 법적 은퇴연령은 만 62세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치는 2023년 1월 1일부터 1966년 출생자에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⁴⁾

다만 해당 내용은 국회의 반대에 부딪혀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않았다. 2021년 11월

1) Cogny, E.(2021), “Réforme des retraites, que doit-on en attendre?”, *Franceinfo*, 26 novembre, <https://www.francetvinfo.fr> (검색일 : 2021.11.25).

2) Méral, C., C. Tixier, N. Bidard, T. Simonet, E. Delevoye, T. Le Hec, F. Decominck and N. Sadok(2020), “SNCF : la grève la plus longue de l’Histoire”, *Franceinfo*, 2 janvier, <https://www.francetvinfo.fr> (검색일 : 2021.11.25).

3) T. L.(2021), “Retraites : le Sénat veut engager rapidement le report de l’âge du départ à la retraite à 64 ans”, *BFM TV*, 13 novembre, <https://www.bfmtv.com> (검색일 : 2021.11.25).

4) Public Sénat(2021), “Retraites : le Sénat vote le report de l’âge légal à 64 ans”, 15 novembre, <https://www.publicsenat.fr> (검색일 : 2021.11.25).

17일 국회 사회복지위원회는 은퇴연령을 만 64세로 높이는 방안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차원에서는 은퇴연령을 상향하기 위한 움직임을 구체화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 발 물러섰던 마크롱 대통령도 다시 연금 개혁의 큰 틀을 제시하며 관련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 2021년 12월 15일 TF1와 LCI 합동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는 “앞서 제시한 개혁안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기존 연금체제보다) 더 단순화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새로운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그리고 자영업(independant) 영역으로 나눠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⁶⁾

마크롱 대통령은 아직 공식적으로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금 손질을 다음 임기에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 청년고용계약 도입, 선거용 전략?

코로나19의 대유행과 그로 인한 두 차례의 국가 봉쇄로 청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거나 인턴 또는 아르바이트 등을 하던 청년들이 직격탄을 맞으며 사회·경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2021년 8월 31일 청년고용계약(Contrat engagement jeune) 시행 계획을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직업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직업이 없는 만 16~25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는 청년 구직지원 프로그램인 청년 보

5) Commission des affaires sociales(2021), “Amendement n° AS171”, *Assemblée nationale*, <https://www.assemblee-nationale.fr> (검색일 : 2022.1.21).

6) Leroy, T.(2021), “Réforme des retraites : Macron évoque ‘trois grands régimes’ pour remplacer le système actuel”, *BFM TV*, 15 décembre, <https://www.bfmtv.com> (검색일 : 2021.12.16).

장(Garantie jeune)을 통해 12개월 동안 매월 최대 500유로를 지원받는다. 기본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나 일부 조건하에서는 연장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혜택을 받을 청년은 약 5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 프로그램에 계약(Contrat)이라는 이름을 붙인 데에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에 역점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지원을 받는 청년들은 정부와 일종의 계약을 맺고 고용센터(Pôle emploi) 등에서 제공하는 직업교육을 매주 15~20시간 이수해야 한다.

해당 프로그램으로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적정 수준으로 맞출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새로운 노동 수요가 높아지는 분야에 대한 진출을 장려하면서 상대적으로 하향세인 업종에 대한 접근은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한 지원 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 기존의 구직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할 것으로 보고 있다.⁷⁾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고용계약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프랑스 청년들이 마주한 취업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지만, 무엇보다 해당 지원 프로그램이 오는 2022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차기 대선 1차 투표를 약 한 달 앞둔 시기이기 때문이다. 마크롱 대통령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경제 지원책을 도입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지고 있다.⁸⁾

■ 코로나19의 여진 속에서도 정부 지원책에 호응한 노동시장

2021년 3분기 고용률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을 뛰어넘으면서 노동시장이 점차 안정 정국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다만 정부의 지원정책이 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노동시장 자체의 활성화로 해석할 수 있는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통계청(INSEE)이 2021년 11월 19일 발표한 3분기 고용지표에 따르면, 해당 기간

7) Rabeller, P.(2021), "Contrat Engagement Jeune à 500 euros par mois : comment ça marche?", *Sud-Ouest*, 2 novembre, <https://www.sudouest.fr> (검색일 : 2021.11.28).

8) Poussielgue, G.(2021), "Le contrat d'engagement jeune sous le feu de critiques virulentes", *Les Echos*, 2 novembre, <https://www.lesechos.fr> (검색일 : 2021.11.28).

고용률은 호성적을 거두었다. 2021년 3분기 만 15~64세의 고용률은 전분기 대비 0.5%p 상승한 67.5%를 기록했다. 2분기에도 0.4%p 올랐던 것을 고려하면 최근 반 년 사이 고용률이 1%p 가까이 뛰어오른 셈이다. 이번 고용률은 국제노동기구 기준을 적용해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197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보다는 0.7%p 높다고 한다.

실업률은 큰 변동 없이 2021년 3분기에는 8.1%로 나타났다. 앞서 10월 초 프랑스 통계청의 전망치인 7.6%에는 미치지 못했지만,⁹⁾ 전분기 8% 수준을 유지했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3분기 실업률이 9.1%까지 올랐다가 4분기 들어 8%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같은 시기 실업률이 8.1%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보건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관측된다.

그 외 15~64세 전체 인구 중 약 4.4%를 차지하는 비경제활동인구¹⁰⁾ 또한 2021년 3분기 들어 큰 폭으로 낮아졌다. 수치상으로는 약 17만 5천 명이 줄었으며, 전분기와 비교하면 15~24세에서 1.2%p 감소하면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이어 25~49세에서는 0.2%p, 50세 이상에서는 0.1%p 감소했다. 2019년 말과 비교해도 0.3%p 낮다.¹¹⁾

이러한 성과와 관련해 정부 정책의 효과가 반영됐다는 지적이 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 위기로 대규모 실직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가 도입한 부분실업제도(Chômage partiel)가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해 2020년 3월 1차 봉쇄 때부터 시행된 것으로 기업이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는 대신 정부가 임금을 보전해주는 것을 큰 틀로 한다. 2020년 4월 당시 이 혜택을 받은 노동자는 약 800만 명에 달하며, 이로 인한 정부지출은 2020년 270억 유로를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¹²⁾ 프랑스 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으로 40

9) Le Monde(2021), “Le taux de chômage reste stable en France, à 8,1% au 3e trimestre, selon l’Insee”, 19 décembre, <https://www.lemonde.fr> (검색일: 2021.12.15).

10) 프랑스 통계청 정의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Halo autour du chômage)는 무직자 중에 ① 일자리를 찾고 있으나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경우, ② 일을 하고 싶어하고 여건도 되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③ 일을 하고 싶지만 여건이 안 되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https://www.insee.fr> (검색일: 2021.12.15).

11) INSEE(2021), “Au troisième trimestre 2021, le taux d’emploi est au plus haut(67,5%) et le taux chômage est quasi stable(8,1%)”, 19 novembre, <https://www.insee.fr> (검색일: 2021.12.15).

12) Franceinfo(2021), “Covid-19: pourquoi le chômage français n’explose pas avec la pandémie”,

만 명이 여전히 해당 지원을 받고 있다.¹³⁾

이어 경기부양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2020년 9월 발표된 것으로 1천억 유로(약 134조 원)가 넘는 자본을 투여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졌는데 지속가능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친환경과 에너지 전환 부문에는 300억 유로, 기술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기업 경쟁력 부문에는 340억 유로가 투입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역 간 불평등 해소와 사회연대 강화를 위한 지역 통합 부문에는 360억 유로가 배정됐다. 프랑스 정부가 2021년 9월 6일 발표한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담은 보고서를 보면 해당 정책으로 69만 3천 개 기업의 일자리를 지켰으며 기업 경쟁력 관련 지원으로 23만 1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한다.¹⁴⁾

청년 실업률 감소와 관련해서는 2020년 7월 시행된 1 청년 1 해법(1 jeune 1 solution) 프로그램이 꼽힌다. 이름에서 드러나듯 청년 1명에게 하나의 일자리 또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큰 틀로 한다. 실제 해당 이름의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은 이곳에서 일자리나 직업교육 프로그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사용자는 해당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인력을 충원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정부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프랑스 노동부가 2021년 7월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 약 90억 유로가 투입됐으며 2020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180만 명의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얻었다고 한다.¹⁵⁾

■ 확대되는 백신 접종 의무화, 끊이지 않는 반발

코로나19가 급격히 재확산되는 상황하에 기존 바이러스보다 강한 전파력을 지닌 것으로

14 août, <https://www.francetvinfo.fr> (검색일: 2021.12.15).

13) DARES(2021), “Chômage partiel”, 29 novembre, <https://dares.travail-emploi.gouv.fr> (검색일: 2021.12.15).

14) Gouvernement français(2021), “France Relance : 1 an après le lancement, résultats et état des lieux du déploiement”, 6 septembre, <https://www.economie.gouv.fr> (검색일: 2021.12.15).

15) Ministre du travail de l'emploi et de l'insertion(2021), “Les 1 an du Plan ‘1 jeune; 1 solution’”, 8 juillet, <https://travail-emploi.gouv.fr> (검색일: 2021.12.15).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백신 의무화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며 이를 어길 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엄포를 한 상황이다.

프랑스 정부는 일단 코로나19에 취약한 사람들을 주로 접촉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 2021년 9월 23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업종은 병원과 보건소 등 의료 부문과 양로원과 장애인 시설 등 사회복지 부문이다. 가정방문을 하는 사회복지사, 환자 이송 서비스 관계자, 소방관, 시민 안전 임무를 맡은 군력은 물론 의학 관련 학생들도 백신 의무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백신 접종 의무 업종은 의료 및 사회복지 중심으로 약 12개에 달한다.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사유를 증빙하거나 해당 업종과 관련이 있지만 매우 짧은 시간 동안만 개입하는 경우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후자의 경우 해당 시설에 출입할 경우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보건패스(pass sanitaire)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다.

백신 접종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 무급휴직에 취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백신 미접종을 사유로 인한 해고는 없지만 기관에서 복귀 명령을 내릴 때까지 강제 휴직에 취해진다.¹⁶⁾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지자 의료업계 내부에서는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백신 접종 여부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이를 강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권 침해라는 것이다. 2021년 10월 12일 올리비에 베랑(Olivier Véran) 프랑스 보건부 장관에 의하면 해당 조치가 도입된 9월 15일 이후 이때까지 백신 접종 의무를 따르지 않아 강제 휴직 조치를 받은 인원은 약 1만 5천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 업계 종사자의 0.6%에 달하는 수치다.¹⁷⁾

해당 조치에 반발해 스스로 퇴직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강제 휴직에 들어간 인력에는

16) Gouvernement français(2021), “La vaccination devient obligatoire pour certaines professions”, *Direction de l’information légales et administrative*, 23 septembre, <https://www.service-public.fr> (검색일: 2021.12.16).

17) Colnet, C., V. Gaglione, M. Mouamma, P. Montels, F. Mazou and J. Vlasseman(2021), “Covid-19: des soignants refusent toujours de se faire vacciner”, *Franceinfo*, 16 octobre, <https://www.francetvinfo.fr> (검색일: 2021.12.16).

해당 조치 도입 이후 퇴직한 인력 약 1,500~2,000명도 포함되어 있다.¹⁸⁾ 여기에 배랑 보건부장관은 회사 내에서도 보건패스를 도입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¹⁹⁾

이런 상황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의무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해당 문제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장 카스텍스(Jean Castex) 프랑스 총리는 현재 시행 중인 보건패스 제도를 2022년 초부터 백신패스(pass vaccinal)로 전환한다고 12월 17일 밝혔다. 2022년부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백신 접종을 증빙해야만 다중이용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신패스 도입을 위한 법안이 약 2주간 치열한 공방 끝에 의회를 통과했다. 애초 정부 계획은 1월 15일부터 백신패스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 1월 5일 공개된 프랑스 일간지 르파리지앵의 인터뷰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일부 국회의원이 비판을 제기하며 논의가 중단되는 등 파행이 일었다.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상원까지 올라갔고 일부 내용이 수정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끝내 의회 차원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하원과 상원의 법안 심의 절차가 재차 진행됐고 최종적으로 1월 16일 의회 절차가 마무리됐다. 법안에 따르면 백신패스는 만 16세 이상부터 적용되며 12~15세는 현행과 같은 보건패스를 사용할 수 있다. 또 가짜 백신패스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당과 카페 등에서 소지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 절차가 끝남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1월 20일 전후로 백신패스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²⁰⁾

18) Garcin-Berson, W.(2021), “Covid-19 : ‘Environ 15.000’ professionnels soumis à l’obligation vaccinale ont été suspendus”, *Le figaro*, 12 octobre, <https://www.lefigaro.fr> (검색일 : 2021.12.16).

19) Caron, P.(2021), “Cinquième vague du Covid-19 : quatre questions sur le futur pass vaccinal, qui doit remplacer le pass sanitaire”, *Franceinfo*, 18 décembre, <https://www.francetvinfo.fr> (검색일 : 2021.12.18).

20) Le Monde(2022) “Le passe vaccinal définitivement adopté par l’Assemblée nationale au terme de deux semaines de débats houleux au Parlement”, 16 janvier, <https://www.lemonde.fr> (검색일 : 2022.1.16).

■ 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노동권 외곽 자영업자도 급증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프랑스 내 자영업자들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미국에서 2021년 초부터 총 2천만 명, 2021년 8월에만 430만 명이 퇴직한 현상을 일컫는 대규모 퇴직이 프랑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한다.

프랑스 자영업자 연합회(Union des auto-entrepreneurs)는 코로나19 보건위기 기간 동안 하루 평균 2,500명의 자영업자가 신규 등록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전 2,200명과 비교해 14%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최근에는 3,500명으로 늘었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의 급격한 증가세와 관련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본격화된 재택근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있다. 사무실 또는 회사 조직과 분리된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온전한 자율성이 주어질 때 더 높은 효율성이 발휘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이 같은 현상은 특히 젊은층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한다.²¹⁾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맥락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 2021년 12월 14일 사회보험징수공단(URSSAF)에 따르면 2020년 약 72만 명이 새로 자영업자(자영노동자)로 등록됐는데 이는 전년대비 8.2% 증가한 것이다. 1인 자영업자(auto-entrepreneur) 등록 수는 처음으로 유한책임회사(SARL)와 1인 유한책임회사(EURL) 수를 넘어섰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새로운 자영업자 중 85%를 차지하는 자영업자 대다수가 배달업 또는 운송업에 종사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우버이츠(Uber Eats)와 딜리버루(Deliveroo) 같은 온라인 주문 플랫폼과 연계해 수입을 창출한다.²²⁾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자 생필품 구매와 의료 서비스 목적 등 극히 일부의 조건하에만 이동할 수 있게 했다. 또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을 전면 금지했다가 점차 상황이 호전되자 음식을 배달하거나 포장을 허용하며 단계적으로 완화했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온라인 주문 플랫폼은 급성장했고 여기에 소속된 배달원 수도 급격히

21) Dupont, F.(2021), “Entreprises : 3500 personnes se lancent comme auto-entrepreneurs chaque jour, selon une association”, *Franceinfo*, 17 décembre, <https://www.francetvinfo.fr> (검색일 : 2021.12.18).

22) Cugny, E.(2021), “Covid-19 : le nombre d’auto-entrepreneurs en hausse pendant la crise sanitaire”, *Franceinfo*, 15 décembre, <https://www.francetvinfo.fr> (검색일 : 2021.12.18).

증가했다. 2021년 초 우버이츠는 프랑스 230여 개 지역에서 3만 5천 명, 딜리버루는 300여 개 지역에 1만 4천 명의 배달원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스트잇(Just Eat)의 경우 공개되지 않았지만 프랑스 2천여 개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알려졌다.²³⁾

문제는 이들이 해당 플랫폼에 고용된 임금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자영노동자) 신분으로 계약을 맺는다는 것이다. 공식적인 노동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민자 등 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임금노동자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노동자로서 받을 수 있는 사회보호 시스템이나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²⁴⁾

이러한 현상이 유럽 전역에서 나타나자 EU 차원의 움직임도 나왔다. 2021년 12월 9일 EU 집행위원회는 우버와 딜리버루, 볼트 등 온라인 플랫폼과 계약을 맺고 배달원 또는 운전기사로 일하면서도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노동권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을 중단하기 위한 지침 초안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임금노동자성 인정 기준 5가지를 마련하고 이 중 2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임금노동자성을 인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5가지 기준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운임을 정할 수 있는지, 플랫폼 또는 회사가 노동자를 감시 또는 제재하는지, 노동자가 특정 업무를 거부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지, 노동자가 고객명단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지, 노동자가 기업이 결정한 행동기준을 따를 의무가 있는지이다. 해당 조치로 380만 명이 임금노동자 지위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²⁵⁾

23) Tusch, A.(2021), “Quel statut juridique pour les livreurs à vélo?”, *RTL*, 8 février, <https://www.rtl.fr> (검색일: 2021.12.18).

24) Kristanadiaia, G.(2021), “Livres: la course à la dignité”, *Libération*, 15 juin, <https://www.liberation.fr> (검색일: 2021.12.18).

25) Lambert, E.(2021), “Uber, Bolt, Deliveroo... Trois questions sur ‘la présomption de salariat’ voulue par Bruxelles pour les travailleurs des plateformes numériques”, *Franceinfo*, 9 décembre, <https://www.francetvinfo.fr> (검색일: 2021.12.18).

■ 맺음말

2021년 가시적으로 드러난 수치들을 두고 보면 프랑스는 노동 영역과 관련해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 통계 수치들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긍정적 평가가 가능한 수준을 나타내고, 심지어 그 이전보다 호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노동시장 안정화를 위한 프랑스 정부의 조치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단순히 수치의 등락폭으로만 평가할 수 없는 맥락이 존재한다. 실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실업률과 전례 없는 고용률을 막대한 공적 자본을 투여해 지탱하고 있는 면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 자체의 역동성이 증가했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와 이로 인한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와 함께 사회 시스템 외곽으로 밀려나는 노동자 또한 증가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이는 앞으로 풀어야 할 새로운 노동 이슈가 등장했다는 것을 말한다. **KLI**